

과거정부 소외 불이익 보상받나...광주·전남 기대감 고조

정부 예타면제 사업 29일 발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할 대상이 다음주에 발표될 전망이다. 따라서 그동안 예타 때문에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합·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지역 균형발

성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등 2건, 道 SOC 사업 3건 요청
지자체별 1건씩 지정 될 듯...새만금 신공항 포함 여부 촉각

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낙후 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 등이 반영되는 예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역 균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자 정부가 예타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

특히 예타는 인구수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 등 호남은 그동안 수도권과 영남 등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 광주와 전남은 기대감을 걸고 있다.

정부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1건씩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타와 관련해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호남이 소외된 만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 불이익'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광주시는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허브를 만드는 '인공지능 중심 창업단지 조성' (사업비 1조원)과, 허브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전문기관과 연계해 광융합 기

술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광융합산업 핵심 기술 구축' (8000억원) 등 2건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전남도는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시설)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요청했다.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연도교(4828억원) 건설 사업을 비롯해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9008억원) ▲여수 화태-백야 간 연도교(5277억원)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예산 규모가 조 단위이기 때문에 지자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들로, 광주·전남의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다.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발표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과거 보수 정권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이 문재인 정부들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 신공항이 하나 더 건설된다면 두 곳 중 한 공항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호남에 2개 국제공항이 균형발전엔 맞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3일 정부가 옛광주교도소 부지 활용·개발 계획이 발표하면서 이 곳에 추진되고 있는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도 관심을 받고 있다. 옛광주교도소 전경.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파크' 조성 탄력? 무산?

정부 빈 교정시설 개발 계획

광주시 "대통령 공약...꼭 성사"

정부는 옛광주교도소 부지 활용·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높다. 광주인인 정부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광주시의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도 구체화되거나, 반대로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3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과 관련, "기재부의 유류국유지 활용방안을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현재 광주교도소 관리 부처인 법무부와 광주시 간 논의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부 소유 부지로 전국의 비슷한 땅에 대한 장기 계획을 발표한 만큼, 광주시와의 사전 논의는 없었지만 광주시의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의 한 축인 로파크 등이 계획에 포함돼 있어 추후 광주시와의 논의를 통해 전반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로파크는 법 관련 체험·교육, 그리고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광주시는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은 세계 인권교류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념하고 교육·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기도 한 만큼 반드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특히 "광주교도소는 5·18의 역사적인 현장으로 5·18사적지로 지정돼 있으며, 향후 미래세대를 위해 원형 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오는 2024년까지 7년간 총 사업비 498억원을 들여 법무부 소유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8만7824㎡ 규모로 '민주·인권 기념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주·인권 기념파크에는 인권교육 훈련센터, 인권평화 교류센터, 인권평화 기념공원, 유스호스텔 등이 들어선다.

앞서 광주시가 발표한 중간 용역보고회 사업 콘텐츠 구상안에는 민주·인권의 역사 체험 배움 공간, 민주열사관, 수행시설 전 시공간, 민주·인권역사관 등이 포함돼 있다. 세계인권도시와 연대하는 교류와 교육의 거점 공간도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인권연구교육센터, 국제인권교류센터, 인권미디어 박물관, 시민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문화도시 광주에 걸맞게 문화와 인권을 접목한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오광록 기자 kroh@

정치적 논리 떠나 도시재생 해법 찾아야



김은영의
'그림 생각'

(254)목표

오래 전에 읽었던 에세이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골목길 기행을 주제로, 당시만 해도 드물었던 계획도시 창원과 목포를 비교한 글이었던 것 같다. 창원은 골목길을 일부러 찾아보아도 모든 길이 신작로 같았고, 목포는 신작로를 걸어 보려 해도 모든 길이 골목길 같았다는 내용이었다. 수십 년 전에 이 대목을 대했을 때는 영 호남 차별이라는 정치적, 권력적 의미로만 받아들여 분노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이 사회공동

체 대신 건물공동체만 남을 정도로 개발의 광풍이 휘몰아쳤을 때도 고유한 역사와 오랜 삶의 터가 골목길로 상징될 수 있다는 점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다.

요 며칠 목표가 뜨겁다. 목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고향이어서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갔던 곳일 뿐만 아니라 한때 대학 강의를 하느라 몇 학기를 줄곧 다녔기에 그지없이 정겨운 곳이다. 구도심의 적산가옥을 여행자의 눈으로 보면 서 근대의 역사적 비극을 떠올리고 지난 세대의 흔적을 상상해 보면서 무한한 시간여행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부디 목표 문제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 현명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민 작가(1963~)의 '공장 지대'(2015년 작)는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곳으로 근대 산업 유산인 조선내화 옛 공장 건물과 공장 뒤편 운곡동에 웅

기종기 모여 사는 적산가옥들을 그린 작



이민 작 '공장지대'

품이다. 10여 년 전부터 사라져가는 장소를 화폭에 담아오고 있는 이민 작가는 목표의 북항, 목표역, 해안 도로와 수산물 시장, 작은 적산가옥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비롯해 얼마 전부터는 양림동과 방림동 등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추억의 장소를 따뜻하게 표현해오고 있다. 목판화 작가로 이름난 이민 작가는 최근 판화와 회화를 섞는 방식인 판 타블로(Pan Tableau)기법을 고안해 새로운 조형 언어로써 지난 삶의 풍경들을 소환하는 작업을 드라마틱하게 펼쳐내고 있다.

<미술사박사>

문 대통령 “대주주 중대탈법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적극 행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예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톱어디스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생 경제는 대기업

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역설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 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도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공정경제”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